

김 총리 “응급환자 뱅뱅이 해결 위해 이송체계 혁신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응급실 미수용·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배후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이라며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이틀째 “응급의료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등 인프라 개선 챙길 것”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광주·전북·전남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시사점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의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전북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 그 이후의 과제는?... 연구용역 착수

행안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세부전략 수립 착수
광역단위 행정통합 첫 사례... “선도모델로 정립”

행정안전부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전국 행정통합 논의 중 유일하게 결실을 본 사례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최근 ‘광역시·도 행정통합 세부발전전략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는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

앞서 올해 초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왔으나 대부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거나 표류 중이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큰 충돌 없이 행정통합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처음으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을 이룬 사례가 됐다.

현재 정부와 양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 등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여건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

다. 시·군·구 인구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요 거점과 소멸위기 지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중심이 될 거점 도시와 낙후 지역 등 권역을 유형화해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또 통합특별시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제도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전수 조사해,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사업들도 구체화할 계획이

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례 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 사례인 만큼,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연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 피’ 실종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70%가 60대 이달 10일 기준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75명 평균 63세... 50대 21%·60대 70%·70대 8%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10명 중 7명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후보조차 50세로, 유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 젊은 인재를 사실상 실종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총 75명으로, 평균 연령은 63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3명(70.7%)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50대는 16명(21.3%), 70대는 6명(8.0%)이었다.

최연소 후보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인엽 공주대 교수·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으로 나란히 50세, 최고령은 대구 교육감 선거에 나선 서준형 전 대구 서구

정장으로 74세다. 예비후보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68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57세인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1명만 등록해 평균 연령이 57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구·대전·울산·충남 등 4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노인 기준선인 65세를 넘었다. 특히 충남에는 70대 후보가 2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후보 2명을 배출한 세종은 평균 연령이 59세였고, 제주도 세종과 같았다. 부산·세종·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후보 평균 연령은 60대였다.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하면 교육감 선거

의 세대 공백은 도드라진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교육감 후보들과의 차이는 3.6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에는 2030 세대 예비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했다. 최연소인 대전시장 선거 도전자 강희린(29)씨를 비롯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37세) 개혁신당 대변인, 세종시장 예비후보 하현휘(39세) 변호사 등 젊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정당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두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 젊은층의 출마가 쉽지 않다.

대한국교육법학회 임원 A씨는 “정치적 활동 또는 기반을 통해 선거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분리되는 선거다 보니 선거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다”며 “교육을 생업으로 삼으신 젊은 분들 중에서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

윤호중 “중동발 삼중고... 고유가 지원금이 ‘버팀목’ 역할” “중동발 삼중고,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닥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중동발)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친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 상승의 부담은 국민 생활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일선에서 신청·지급 업무를 수행할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행안부도 지방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지급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국민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